국세청, 세무조사컨설팅가업승계 세정지원… 기업부담 줄인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수출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편조사컨설팅가업승계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 축소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실시한다.

또한, 각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세무컨설팅과 환급금 조기지급 업무를 도와주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 및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수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세청도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시권 들어온 ESG공시…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 확대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전문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문위는 ISSB의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경영환경, 기업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 논의를 통해 국내 의견 형성에 나서고 있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4월 자문위를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를 만들어 본격적인 ESG공시 도입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KSSB를 지원하는 공식자문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회계기준원은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로 승격하고 학계인사와 기업·투자자 분야 위원을 보강하는 등 현 14명에서 20인으로 늘린다.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KSSB에 전문자문을 제공하고, ISSB 공시기준 관련 정규절차문서(공개초안, 토론서, 정보요청서 등)를 검토하고, ISSB 공시기준의 번역안 검토를 맡는다.

또한, 국내에 적용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과제의 발굴에도 나선다.

자문위는 연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되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 내에 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필요할 때마다 부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3월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된다

3월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시행일은 3월 2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